

제424회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30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업무보고
 -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 금융위원회

상정된 안건

- 업무보고 2
 -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 금융위원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4월 8일 제1차 특위에 이어서 오늘 제2차 특위가 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전종덕 위원 예.

○위원장 윤영석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수개혁안은 어려운 상황에서 통과된 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지만 기금 고갈 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근본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특히 2030 청년세대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는 이러한 국민적인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대신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김범석 기획재정부제1차관님,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님,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우리 회의장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기획재정부
- 다. 고용노동부
- 라. 금융위원회

(10시06분)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종덕 위원 발언 순서는 언제 주시나요?

의사진행발언, 안건 상정하기 전……

○위원장 윤영석 업무보고 듣고 나서 나중에 질의하기 전에……

○전종덕 위원 아니, 안건 상정하기 전에 먼저 주셔야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 짧게 주시지요.

○전종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연금개혁의 양대 축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화 방안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연금특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연금개혁이 재정안정화에만 있고 특위가 이것만을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목적과 연금개혁 합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동의 운운하는 것 또한 개인에 대한 무례를 넘어 특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각자의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면 특위에서 허심하게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연금특위에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일 것입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와 이해는 민주주의적 숙의를 통해 조정되고 통합되어야 하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합니다.

앞으로 연금특위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진정한 통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난 1차 회의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세심하고 적극적인 회의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전종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종덕 위원님께서 각자 입장을 존중하자는 말씀 저는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

하고요. 서로 포용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이 논의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전종덕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일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1%p 높이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종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후소득 보장 역시 강화하였습니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되며 출산·군 복무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어 청년세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가입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 조치, 구조개혁 등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진영주 연금정책관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이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사회복지정책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복지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다음 연금체계 개요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다양한 연금으로 중층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을 보시면 0층 기초연금,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등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 등을 가입자로 하는 직역연금은 별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제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적인 소득보장제도이고요.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공무원 등 직역가입자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만 18~59세까지의 국민이 가입합니다. 작년 말 기준 가입자는 2198만 명이며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63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노령·장애·유족 연금 등을 받는 총 수급자는 716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547만 명입니다.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이고요, 이번에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2033년에 13%가 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자의 경우에 26년 이후 40년을 가입하면 소득의 43%를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비롯해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급여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수급자의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부분적립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소득대체율, 본인 소득,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급여 방식입니다. 따라서 첫해 연금이 결정된 이후에는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금재정의 안정적 유지, 수익 최대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고요. 24년 말 기준 기금 규모는 1213조 원입니다. 24년 수익률은 15%입니다.

다음 쪽,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가 대상이고요, 24년 말 기준 676만 명의 어르신이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으로 이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26조 1000억 원이고요, 이 중 국비가 21조 800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98년에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고 수급연령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재정안정화 조치를 위해 대체율을 인하하는 한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크레딧제도와 현재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다시 악화되었고요 2007년 이후 18년 만인 올해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혁을 위해 21대 국회

당시 정부는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했고 국회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연금개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선 후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요.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연금특위 구성의 안이 올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입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되고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됩니다.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 국가의 지급보장의무를 명확히 했고요. 둘째아부터 인정되었던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로 확대되었고 군복무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도 현재 납부재개자에서 일정 소득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자의 가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한 기대효과입니다.

보험료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우선 기금 소진 시점이 현재 2056년에서 기금수익률을 1% 추가로 높일 경우 2071년으로 15년 연장되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되어서 청년세대의 총 보험료 부담은 경감되고 인상된 소득 대체율은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번 개혁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청년세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아직 미흡합니다. 재정안정 조치와 구조개혁 논의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청년 의견을 반영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해서 정부 개혁안에 포함되었거나 국회에서 제기가 되었던 내용 중심으로 추가 논의 과제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재정안정화 조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로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소득 재정효과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적합한 도입 방안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고 지원의 경우 현재 크레딧 등에 연간 약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더하여 기금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둘째, 노후소득 보장 강화입니다.

현재 59세 가입 연령을 상향하고 실질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노인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대상 및 연금액을 조정하고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이스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석 기획재정부제1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금개혁특위에서 노후소득 보장 여건 변화와 연금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모수개혁에 합의를 이룬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인구구조,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 저하 등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초연금 등 재정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선진국 대비 낮을 뿐만 아니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보완적 역할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지원 TF 등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위에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논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4대 공적연금 재추계 등을 포함한 향후 45년간 장기 재정전망을 하반기에 발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정창길 재정 건전성심의관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주환욱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경제구조개혁국장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여건 변화와 연금개혁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노후소득 보장 여건 변화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8년 도입 당시 70세였던 기대여명은 현재 84세로 늘어나 있고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이를 부양할 생산연령인구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저성장·저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 소진 및 미래 보험료 부담 우려 등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 저하 등 세대 간 형평성 이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번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2036년부터 연금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71년 기금 고갈 이후에는 필요보험료율이 최대 39.2%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공적연금 의무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중장기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 일반재정의 여력도 제약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혜 인원 확대, 급여수준 인상 등으로 25년 21.8조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14년 대비 국고 투입 규모가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본격 진입하면서 재정부담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등으로 국고 지원 규모가 지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 규모도 확대 추세입니다.

한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선진국 대비 낮은 가운데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보완적 역할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퇴직연금은 영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률이 저조하고 타 연금 대비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며 개인연금도 낮은 수익률과 일시금 수령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연금개혁 추진 현황입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모수개혁 합의와 연금개혁특위 설치 관련 여야 합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범부처 지원 TF를 통해 연금특위 논의사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 제도개선 TF를 통해 상반기 중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과제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사적연금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 운용규제 개선 등 수익률 제고와 함께 중도 누수 방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대 공적연금 재추계 등을 포함한 향후 45년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금년 하반기 중에 마련 발표하는 한편 연금개혁과 밀접하게 연계된 계속고용 활성화, 부분연금제, 부동산 자산 연금화 등 주요 전략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검토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범부처 지원 TF를 통해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완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주환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 존경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생·초고령화 시대에 모든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도입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출발은 늦었습니다만 적립금은 이미 400조를 넘어섰고 43만 개 사업장에서 675만 명의 근로자가가입하여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의 추계에 따르면 2040년에서 2050년경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0조 이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최대 연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아직은

연금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신설, 실물이전 시행, 로보어드바이저 시범사업 등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도입, 연금 수령 유도 등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준비하는 노후 안전망입니다. 퇴직연금이 모든 사업장에 뿐만 아니라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정책실장이 퇴직연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진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 퇴직연금제도 개요입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제도를 도입하여 적용 사업장을 점차 확대하였고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도 해외 주요 선진국과 같이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 체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로 구성됩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세 가지 퇴직급여 중 한 가지 제도 이상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제도가 국민연금기금이나 공무원연금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퇴직금에서 출발한 퇴직연금제도는 기금형 운용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운용주체뿐만 아니라 운용 방식과 수급 방법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문 수탁법인인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을 운용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후불임금적 성격과 개인의 연금선택권을 고려하여 가입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며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의 운용을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에 있어서는 퇴직연금은 개인이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국민연금은 운용 결과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중심으로 노후를 준비해 왔으나 향후에는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최대 연금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와 공적연금 위기를 경험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여 그러한 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퇴직연금 현황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가입 대상자 중 675만 명이 가입하였고 가입률은 53.2%입니다. 사업장 기준으로는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중 42만 9000개소에서 도입되어 도입률은 26.4%입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으나 사업장 도입률과 근로자 가입률은 최근 정체상태이며 3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2024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과제에 대한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반가량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로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립금의 대부분이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되어 낮은 수익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최근의 제도개선으로 2023년 수익률이 5.26%를 기록하였으나 가입자의 위험 기피 성향과 적립금의 후불임금적 성격으로 인해서 가입자는 여전히 퇴직연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을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2023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는 약 53만 계좌, 금액은 15.5조 원입니다. 이 중 연금 수령은 계좌 기준으로 10.4%, 금액 기준으로는 49.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0년 대비 불과 3년 만에 연금 수령 계좌 비중이 3배 이상 증가하고 금액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개선세가 뚜렷하여 향후에는 연금 수령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령액을 보시면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어야 연금 형식으로 찾아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아직 20년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개선세는 더욱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추진과제의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 개선, 연금 수령 유도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중퇴기금 활성화를 통해서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모가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 순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현재 가입하지 못한 597만 명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을 사회에 적립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 용자 지원으로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면서 조기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적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금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어 2년 반이 조금 지났으나 수익률이 매우 우수하고 수수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10%씩 매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와 같은 행정서류 작성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수익률을 개선하여 더 많은 연금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퇴직연금체계는 사용자와 금융기관이 계약을 맺어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계약형 체계인데 금융 지식이 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므로 수익률 개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운용체계를 혁신해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기관이 대신 운용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러한 기금형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유일한 기금형 모델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 기금의 성과 분석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형뿐만 아니라 현행 계약형 체계에서도 전문기관의 투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AI가 알고리즘을 형성하여 대신 투자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본격적인 제도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운용체계 도입뿐 아니라 기존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실적배당상품과 원리금보장상품 간 가입자의 합리적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 옵션 제도를 개선하고 적립금 운용 우수모델을 발굴해서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중 현상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을 유도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금 수령을 촉진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업해서 2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구간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연금 자산을 지속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청년·저소득층 대상별 추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의 최상위권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재직 중에 재정을 투입해서 노후 소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재정 투입 비용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모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퇴직연금 개선과제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김유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은 현세대의 노후 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터운 노후 보장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또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적연금의 가입률·수익률·연금화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금 운용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 등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노후 대비와 생애주기별 자산 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적연금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현하고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입니다.

박민우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권대영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개인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체계는 앞서 부처들이 설명드린 만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인연금은 94년에 도입되어 퇴직연금과 함께 사적연금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현재 388조에 이르고 있으며 3층 연금체계에서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의무가입제도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달리 충분한 노후의 보장, 절세 효과를 위한 자발적 납입의 성격이 있습니다. 두터운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인연금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첫째,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으로 연금저축 보험·펀드·신탁,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을 납입할 때 연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수령할 때 16.5%의 기타소득세율이 아니라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납입 시 세액공제는 없으나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금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인연금의 운용 현황입니다.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을 기준으로 가입, 운용, 수령의 세 단계에 걸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의 규모는 24년 말 기준으로 180.1조 원이며 계약당 연간 납입액은 324만 원 수준입니다.

가입률의 경우 과세 대상 대비 10%가 가입 중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가입률이 3.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해지율의 측면에서도 가입자 중 약 절반이 중도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나 의료비 등 불가피한 자금 소요가 아니더라도 소득세 폐널티를 받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쪽입니다.

수익률은 24년 중 3.7% 수준으로 국민연금보다 많이 낮으며 최근 퇴직연금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용상품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79%로 글로벌 주요국 대비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령 단계입니다.

개인연금 계약당 연간 수령액은 285만 원으로 충분한 노후 보장에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연금은 가입, 운용, 수령, 모든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적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여건과 현행 연금체계 구조하에서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적연금의 한계를 감안할 경우 사적연금 중심으로 더욱 두터운 노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개인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특히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갈아타기 서비스, 디폴트옵션 개선 등과 함께 수익률과 수수료 공시를 통해 금융사업자의 경쟁과 선관주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하도록 인센티브도 지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권대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시

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조규홍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과 같은 그런 사회적 보험제도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노후 아니면 질병 같은 거지요? 그런 사회적 위험에 관련해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노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젊은 세대가 저위험군이 되겠지요. 그리고 질병 관련해서는 더 건강하고 노동력이 훨씬 더 풍부한 그런 국민들이 저위험군이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강선우 위원** 이들 사이의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저위험군으로부터 고위험군 사이로 자원이 순환되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지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 기본 개념에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선우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좁혀서 봅시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좀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관련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큰 줄기는 재정안정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나 그런 것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조금 더 강조를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둘이 상충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상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장관님,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안정돼야 되고 우리가 연금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스템이 걱정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 연기금 자체를 끊임없이 많이 쌓아 놓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의 본래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재정안정이라 함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이다, 하위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강선우 위원** 그러면 이 재정안정과 함께 커플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기금 고갈, 그래서 공포 조성을 하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슬라이드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국민연금기금의 국제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각 국가별로 GDP랑 비교해서 국민연금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위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걸 절대금액, 절대액 순위로 해도 미국, 일본에 이어서 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풍부하게, 충분하게 기금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GDP 비중에서는 1위니까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금 적립하고 있지 않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선우 위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치 연금 지급액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2개월 정도 급여 지분만 적립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몇년도 되면 기금이 다 고갈돼 가지고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 받지 못하게 될 거다 이것은 사실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지요.

연기금이 만약에 소진이 다 됐다 그러면 그것은 연금제도의 붕괴가 아닙니다. 연기금이 다 소진되면 뭘 해야 되느냐?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부과 방식으로 바꾸든지 대안이 나와야 되겠지요.

○강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연기금이 소진됐다는 게 몇 년도부터는 더 이상 연금을 줄 수가 없어가 아니에요. 다른 국가들 보면 연기금이 이렇게 수십 년 치 쌓여 가지고 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연기금이 소진됐다고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처럼 국민의 노후를 놓고 논의 구조를 왜곡해 가지고 계속 뭔가 공포감을 주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 하면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점점점점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 재정안정론이랑 같이 커플링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돌아다니는 연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동의하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도 반영됐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렇다면 이 재정안정 그다음에 이거랑 같이 짹꿍을 이뤄 가지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기금 고갈 프레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재정안정론을 주장할 때, 또 재정안정론을 좋은 명분으로 해 가지고 일각에서 금지옥엽처럼 여기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자동조정장치의 소속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과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여쭤보고자 해요.

편의상 모수개혁, 구조개혁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수개혁은 말 그대로 모수 그러니까 보험료율이라든지 아니면 지급률이라든지 아니면 지급을 시작하는, 수급을 시작하는 연도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런 모수에 관련된 것을 조정하는 게 모수개혁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선우 위원 그렇다면 자동조정장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수와 함께 가는 것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속이 모수개혁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구조개혁이라 함은 단층적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만 있다든지 아니면 기초연금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레이어(layer)만 가지고 있는 국민의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을 멀티 레이어로 바꾸는, 즉 기초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이렇게 다층적인 보장구조로 바꾸는 게 구조개혁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다면 이 자동조정장치의 소속은 모수개혁이다라는 거기에 관련해서는 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회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구조개혁의 범위는 다양한데 굳이 나눈다고 하면 모수개혁 쪽에는 들어가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모수개혁에서 그걸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금특위에서 자세히 토론을 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강선우 위원 다음 질문에서 이어 갈게요.

○위원장 윤영석 강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청년 모경종입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수치료 요약을 하자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한다 그리고 대체율을 43%로 조정한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청년세대의 반대 여론이 있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모경종 위원 장관님은 이렇게 청년세대가 반발할 거라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청년들께서는 연금개혁을 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세대분들이 기존 세대에 비해서는 반발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부안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자동조정장치나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을 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더 반발이 컸던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오늘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슬하에 자녀가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연금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모경종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께서도 이 한 축을 담당하는 분이신데 본인 자녀와도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청년세대가 분명히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더욱더 들여다볼 기회가 없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렵히 국가에서 알아서 해 주겠거니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모경종 위원 청년세대가 반대하는 것은 지금 내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된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모경종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7페이지 하단에 기금 소진 연장으로 인해서 청년세대의 총보험료 부담이 줄었고 크레딧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소득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를 확대했다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물론 이번 연금개혁이 의미 있는 진전이기는 합니다만 청년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이게 세대 간 형평성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이번 과정에서 과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나 기회가 도대체 얼마나 있었느냐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이기는 하지만 자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관님도 자녀분들이랑 이 이야기를 안 해 보는데 이 기회의 장 자체가 충분히 열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다음은 김민석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서 노후소득 다층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직연금을 살펴보면 미래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는 중도에 인출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청년들은 좀 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장관직무대행께서 통계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들이 딱 입사를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이직을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 삼십몇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30% 중반대로 이직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들어간 직장에서 중도 인출, 중도 해지를 하고 다른 직장을 가거나 다른 직업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이런 경우에, 청년세대는 직장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급 개시 시점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중도 인출·해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청년과 다른 세대와 똑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청년들이 연금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 저희도 재정·세제 인센티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다른 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이 임금후불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택 구입이라든지 임차보증 그다음에 회생 이런 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화하거나 의무화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말씀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우니까 못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어려우니까 방법을 찾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금융위원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층적 연금체계를 한번 살펴봤을 때 개인연금 활성화는 너무나도 중요한 걸 위원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고 아까도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미래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 중도 인출·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건 개인연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청년세대는 초기 소득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비해서 기대하는 수익률까지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네요.

금융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청년세대의 개인연금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또는 저비용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공감하고요. 정책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세제 쪽이나 필요하면 재정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네 기관 모두 0층부터 3층까지 표를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그려 오셨더라고요. 가장 상층에 있는 게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개인연금인데 그 말은 3층에 있으니까 가장 나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가장 접근성이 높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의지를 만들어 주는 것 역시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재부는 항상 말씀하는 게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그렇게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예, 지속가능성, 재정 건전성.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물론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처의 태생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재정건전성에 집중하다 보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의 목적 자체를 해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평계로 대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걱정하는 게 연금의 고갈인데, 지난번에 최상목 부총리도 국민연금 충당 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셨던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국제기준상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재정 당국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기획재정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런데 그 부분은 국제기준상 안 담는 부분이지 국제 신평사에서는 저희의 고령에 따른 연금이랄지 건강 비용 증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경종 위원**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퇴직연금·개인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다른 기관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도 같이 챙겨 주시고 인센티브를 챙기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모경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 박수민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모수개혁을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설명해 주셨듯이 연금의 고갈 연도를 15년 늦췄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수민 위원** 그 외에 저희가 고친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데 그 보험료율 올린 게 아시다시피 국회 합의를 통해서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렵지만 이번에 국회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올린 것은 단순히 소진 연도 연장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연금개혁을 위해서 국회가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데에 저는 의의를 찾고 싶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희가 모수개혁을 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대단한 개혁을 했지만 저희가 고친 것은 15년 연장한 것 그것뿐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개혁의 시작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혁해야 되는 구조개혁의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연금만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43% 소득대체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퇴직 전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결국은 퇴직연금·개인연금까지 더한 다층 연금이 필요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처음에 다층 연금을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층 연금, 제가 대단히 지지하고 21대 국회와 차별화돼서 지금 22대 국회에서 다층 연금이 논의된 것이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재부·복지부·노동부·금융위 이렇게 모였습니다.

다층 연금을 놓고서 대한민국 정부 관련 부처들이 모였던 기준의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기준에도 같이 작업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거나 그 성과물이 시행된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 점을 꼭 시작하면서 확인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는 국민연금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층 연금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층에 대해서 관련된 정부 부처와 국회가 모인 것은 지금 대한민국 개국 이래 이게 첫 자리입니다. 첫출발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부터 이 전체 그림을 잊지 않고, 나무를 보다가 숲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이것을 강조드립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인연금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 주셨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박수민 위원 그러면 좀 엉뚱한 질문입니다마는 다층 연금 속에서 금융위원회의 역할은 개인연금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도 결국 운용을 금융회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수익률 제고에 금융위원회에서도 기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또 국민연금이든 국민들이 납부한 재원은 결국 자본시장에서 운용이 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납부의 기간은 시점이지만 운용의 기간은 10년, 20년, 40년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박수민 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한 이유는,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으면 다층 연금을 쌓아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진정한 다층 연금으로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려면 돈을 잘 풀려야 됩니다. 돈을 풀리는 곳은 자본시장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분발을 요청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거듭 확인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층 연금을 통해서 논의하고자 정부 부처와 국회가 모인 게 첫 자리이고 여기서 출발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부 드렸습니다.

○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동의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자본시장이 잘되는 것이 다른 연금들의 수익률 제고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연금들의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 **박수민 위원** 맞습니다.

복지부장관님,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 누적수익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박수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하고 말씀 주십시오.

1%대입니다. 해외 주식투자 수익률은 제 기억에 6~7%가 넘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것은 1%대고 해외 주식에 투자한 것은 6%가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납부한 국민들께 도리가 아닙니다. 이 격차는 국민연금을 운용한 기금운용본부에도 있겠고 동시에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금융위원회에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리공단을 규제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높아지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아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자율성과 원칙을 가지고 현재 기금운용수익률에 대해서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연금개혁에서도 1% 증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박수민 위원** 각자의 역할 속에서 다층 연금은 성립 가능하고 발전하고 국민의 노후는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기금운용수익률, 특히 국내 주식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금융위의 책임이고 또한 그것을 규제하는 기획재정부의 책임도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들은 오후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인순 위원** 복지부장관님, 그동안 어쨌든 연금개혁 추진하느라고 노고가 크셨고요.

지금 저희가 연금특위를 국회에서 만든 것이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 **남인순 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에서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있고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사연금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과정을 보통 구조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구조는 다층 연금체계로 되어 있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 **남인순 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다양한 연금으로 중층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연금개혁특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층적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연금체계를

상호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각각 제도의 성숙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논의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그래서 이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부분은 복지부에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셔 갖고……

오늘 보고 내용에는 그 부분이, 기재부 보고 내용에는 있기는 한데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보고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데 그건 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아무래도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언제 정도에 연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글쎄요.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연금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위에서……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특위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부처 차원에서 지금 TF를 만드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데 그걸 주도적으로 핸들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복지부에서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복지부하고 기재부가 같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구조개혁 부분에서 다층 연금체계를 새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관계성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보고 내용에 제대로 안 들어 있어서 이후에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기재부 김범석 차관님, 제가 봄면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기재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금개혁 이후에 국고 투입 규모가 확대가 된다라는 전망을 2페이지에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것이 크레딧이라든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아마 이후에 발생할 부분이고 크레딧 같은 경우는 발생 시기가 아니고 연금 지급 시기에 국고라든지 아니면 기금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정 전망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쨌든 기재부는 전체적으로

재정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예를 들면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입니다—재정 소요와 관련해서 지원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장기 추계 전망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26~93년으로 제가 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때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50조가 들어가요, 국고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3 대 7로. 그런데 출산 시, 발생 시기에 하게 되면 약 108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42조가 절약이 돼요. 그러면 이 장기 재정 추계를 봤을 때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는 사전 지원이 더 낫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걸 왜 반대하시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장기 추계 전망 해 보셨지요, 이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결국에는 시점과 재원의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약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사실 차이는 없는 부분이고요.

○남인순 위원 수혜자는 그런데 재정 소요에 대한 추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러면 지금 당장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연금보험료로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복지부하고 상의를 한번 드려 볼 텐데……

○남인순 위원 상의 한번 해 보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남인순 위원 이번에 저희가 모두개혁을 할 때 이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여야 모두 다 이거를 출산 시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재부가 반대를 하셨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오셨길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국가의 지급 보장 문안도 최종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고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국가가 재정에서 최종 안전판으로서 지원하느냐 차이일 뿐, 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인순 위원 예, 하여튼 추후에 더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PT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복지부로부터 어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자동조정장치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보시면 도입 시기가 또 중요한데 36년 도입하느냐, 49년이냐, 54년이냐, 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남인순 위원 다른데 지금 보면 20세인 경우에 총 받는 연금액이 자동조정장치를 언제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14% 정도 줄어들고 또 30세인 경우는 16% 이렇게 세대별로 다 줄어들어요, 총 연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금 수급액도 적기는 하지만 결국은 어쨌든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자동조정장치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받은 자료라서 한번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장관님, 이 자료는 제가 어제 받았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자료는 13%, 43% 정해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3%, 43% 정해진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하여튼 간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감액 폭은 축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인순 위원 이게 세대별로는 다 손해를 보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 도봉구갑 출신 김재섭입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재정안정에 조금 방점이 있으신 것 같고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소득보장에 조금 더 방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화되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대정부질의 때도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기금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리가 지금 첨예하게 갈리는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해결, 실마리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조금 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차 재정추계에 4.5%의 기금수익률 발표를 이미 보건복지부가 했는데 왜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그리고 저희가 연금안에 합의를 하기 전까지 장관님과 차관님은 어떠한 근거에서 왜 재정추계의 4.5%를 무시하고 5.5%로 인상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무시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추계를 할 때 그때 또 자문단에서 5.5% 정도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겠다고 했고 최근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 10년 수익률을 봤을 때 5.5%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고 또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부담을 하는 보험료 인상률 외에도 공단 그리고 정부가 기금 운용수익률 인상 노력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p 상향 조정해 가지고 제시한 것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노력의 영역과 그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치로 보건복지부가 5.5%를 주는 거야 얼마든지 저희가 응원할 일이지만 그거를 재정추계에 반영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3년, 5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70년의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5.5%라는 걸 달성해야 되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에 떨어진 과제인 건데요. 제가 그래서 장관님 발언 5.5% 관련해서는 12월까지만 추적이 돼서 1월·2월 거 국민연금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신 기금 투자수익률 한번 말씀,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이거는 당연히 월별이고 단기적이고 그러니까 연 단위로 추정을 해서 반영해야 되는 거를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 전쟁이니 뭐니 해서 국제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장관님 보시기에 저 지금 평균 수익률이 5.5%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김재섭 위원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4.5%도 불가능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김재섭 위원 그럼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기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 정부하고 공단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4.5%라는 것도 보수적으로 그 안에서 따지고 했을 텐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5%라고 하는 것은 낙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5%, 말씀하신 대로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5.5%는 어떤 낙관으로 했는지.

이거는, 저는 낙관이라고 계속 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연 단위로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3년, 10년 단위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가 어떤 경제 상황을 충분히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5.5%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저번에 설명하신 내용에도 잘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데 위원님, 저희 지금 기금 축적 규모가 100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김재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200조가 됐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4년·5년 전에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이 4.5%였다면 1200조가 되는 경우에는 5.5%로 추정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고 그것을 왜곡했다고까지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재섭 위원 게다가 저는 그 문제도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금 급여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인 실질 수익률이라는 면도 우리가 좀 따져 봐야 될 텐데 실질 수익률은 보건복지부가 알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내놓으신 통계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그거는 좀 알아봐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의 의도대로 그리고 아까 전에 기재부에서 내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좀 어렵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써 놓으시기는 했는데, 이거 지금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보건복지부가 5.5%나 올렸는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가 지적하는 이유도 보니까 해외투자 비용을, 해외투자비율을 60% 까지 늘린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결로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게 단기 수익률을 볼 것이냐 장기 수익을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아까 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섭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외투자가 훨씬 수익률이 높고.....

○김재섭 위원 장관님, 그 내용은 저도 박수민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서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방식의 느낌이 있어야 젊은 세대도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돈을 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자고 해외투자 비용 60%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5.5%를 무리하게 달성하다가 포트폴리오를 망치게 되는 경우도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장기 투자 비중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까 이걸 바꾸겠다는 것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이 큰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일단 기왕에 5.5% 된 거를 이제 와서 '4.5%로 내리세요'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도 한때 그때 굉장히 많이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낙관적인 경제 상황에 기대해서 수익률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회의의 전체적인 결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를 드리기 때문에 기금수익률이 아까 말씀대로 저희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키인데 이걸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어떤 재정추계에 바탕한 확실한 근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희망이 담긴 내용이라 그러면 저는 그거는 왜곡이라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런 기초적인 가정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수익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예.

.....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연금의 본래 목적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에 있고 그리고 재정안정

화 방안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 방안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라는 앞선 동료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종덕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은 저는 우리 국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국가 책임을 다해서 연금이 공적연금답게 또 연금답게 운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앞의 여러 기관에서 똑같이 보고하셨듯이 연금제도는 저출생·고령화 그리고 일자리 문제 등 우리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가입률을 높여서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화 방안을 동시에 꾀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연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이 1000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18세부터 59세 인구 중에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1위고 또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노인이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를 보여 주고 있는 지표이지요. 그런데 현실이 미래세대까지 부양 부담이나 노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자의 34%에 해당되는 국민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전 국민 대상, 전 국민 국민연금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취지가 좀 무색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의 개념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적용 제외자 674만 명을 포함시키셨는데……

○전종덕 위원 예, 이분들도 고민이고 이분들도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 그런데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군대에 가신 분들은 다시 들어오면 또 가입자가 되시니까요. 이게 정부가 정책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정부의 정책은 장기체납자와 납부예외자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어쨌든 미가입자도…… 제가 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3분의 1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18년 만에 모두개혁 합의를 해서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생각하시는 사각지대 해소는 어느 정도 되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전종덕 위원 정부가 사각지대 해소의 목표를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목표를 제시한 바는 없습니까? 목표가 아예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몇 %를 전환하겠다 이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전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전종덕 위원 정부가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국민연금의 보장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저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특히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에……

표를 보시겠습니다.

일용근로자나 초단시간·특수고용·플랫폼 비전형 노동자나 프리랜서,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는 매우 취약계층에 해당되고 적극적인 가입 촉진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연금 가입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는 19.7%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4대보험 중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비해서 훨씬 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 것은 보험료 부담 때문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 부담인데 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하는 방안인데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이런 비전형 노무제공자들에 대해서 18개 업종에 대해서 노동자분 50% 부담을,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보험료를……

○전종덕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이렇게 가입률을 높여 주고 있는데 우리 국민연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보험료 50%의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여러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이 높은 국민연금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특수 형태 고용자에게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자분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보험료율 지원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분석 중인데,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도 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개선 방안 마련해 주시고요.

보험료율 지원은 이런 비전형 노무제공자들에게 별도의 보험료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율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전종덕 위원 그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종덕 위원** 혹시 자료, 같이 공유해 주기로 하셨으니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분석이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에도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합니
다만 지금까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신 청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에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험료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대표적으로 두루누리제도라든지 실업크레딧, 농업인 지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도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사각지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 명이 넘는데 정부에
서는 오히려 반대로 두루누리 예산은 전년 대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2%를 삭감했고 그다음에 실업크레딧 예산도 삭감했고 농업인 지원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높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이것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전종덕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번 개선 방안에는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험료 지원에서 저희 복지부 소관인 농어민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인구가 축소돼 가지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대신 두루누리사업 지원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덕 위원** 답변을 지금 고용노동부가 안 하셔 가지고……

○**위원장 윤영석** 예, 고용노동부 답변해 주시지요.

○**전종덕 위원** 두루누리사업이나 실업크레딧 예산도 줄었습니다, 2년 연속. 그 관련해
서 왜 줄었는지하고 대책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 위원님 말씀하신 두루누리사업 관련된 예산은 작
년에 876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8820억으로 소폭 증가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좀
전에 복지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
안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실업크레딧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675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 636억으
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종덕 위원** 수치가 다른데 이후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위원님들 모두 1차 질의를 종료한 후에 오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이 만들어진 198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얼마예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던데 6.82%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6.82%입니다.

○김남희 위원 6.82%가 맞고요. 그동안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위기 도 있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36년 동안 연평균 6.82%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몇이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8%가 넘습니다. 8.13……

○김남희 위원 예, 8.13%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남희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예상을 5.5%로 잡은 것은 지난 36년간의 역사적인 수치와 비교해 볼 때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 수익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여튼 저희는 기금 운용 규모가 커진 만큼 1%p 정도는 수익률이 상승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 상승이 아니라 그동안 합해서 누적 평균이 6.82%인데, 그런데 이 것을 5.5%로 잡은 것은 1.3%p를 낮춰서 잡으신 거잖아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내시장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도 감안을 한 것입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 국내시장은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하여튼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는 더 잘하려고 하셔야지 왜 이렇게 낮춰서 잡으시냐 그리고 이게 너무 높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존의 역사적 수익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예,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범석 기재부차관님,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 지금 안 나와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른 OECD 국가들과 다르게 한국 국민연금 재정에서 일반회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의 낮은 보험료 수준과 고령화로 추정되는 수지불균형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데, 이 경우 국가의 조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다른 장

치보다도 특히 산식의 A값 부분에 따른 매우 재분배적인 산식에 기반하고 있으나 재원부담은 전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의 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보험료 외의 수입을 상당 부분 국민연금 수입에 투입시킬 여지가 있다.”, 이것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밑에 보면 OECD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예, OECD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 2022년에 발표했는데 그것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느 정도예요? 오늘 자료 보니까 2025년 기준 9398억 원 국고 지원하는데 국민연금기금 1213조 원이니까 0.07% 투입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김남희 위원** 전체 기금의 0.07% 정도를 국가의 조세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마……

○**김남희 위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07%는 국가의 조세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OECD 보고서에서 얘기한 내용과는 너무 동떨어진 거지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연금공단 인건비·운영비도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

○**김남희 위원**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한데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이것을 책임지는 게 맞느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금액이, 전체 관리·운영비가 5844억 원인데 여기 국민연금공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 비용이 100억 원이에요. 전체의 1.7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수십년 동안 국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겨 왔는데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이 어렵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기재부에서 크레딧 지원, 사전 지원이나 사후 지원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차이가 50조가 나던데요? 그 것은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결국에는 지금 당장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의 차이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김남희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가재정 50조를 절감할 수 있는데 기재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국가재정 50조 줄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역으로 국가재정을 연금하고 같이 볼 거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볼 거냐의 차이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일반회계 국고는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용을 보세요. 국고 지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산크레딧 지원을 출산크레딧이 발생하는 시점에 할 것이냐 아니면 출산크레딧을 받는 시점에 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국고 지원 똑같이

30% 했을 때 지금 지원하는 것이 나중에 지원하는 것보다 국고 일반재정 50조를 아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크레딧을 국고로 지금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기간만 인정해서 나중에 연금보험료로 지원할 거냐의 차이지 않습니까.

○김남희 위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용을 정확히 보세요. 똑같이 국고 지원 3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크레딧 발생 시점에서 할 것이냐, 나중에 크레딧을 받는 시점에서 할 거냐 그것을 비교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그 부분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남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사전에 정확한 질문서를 저희한테 안 주셔서……

○김남희 위원 아니, 질문서를…… 지금 출산크레딧에 대한 내용조차 파악을 안 하고……

지금 국고 지원을 할 거냐 보험료로 지원할 거냐 이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원할 거냐 나중에 지원할 거냐, 그 차이가 50조가 나는데 국가재정 50조를 아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부 수장이—수장은 아니군요. 어쨌든 차관님이 이렇게 제대로 내용을 파악 안 하시고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간비용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김남희 위원 시간비용이 무슨 말씀이에요. 50조를 아낄 수 있잖아요. 나라의 곳간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내용 좀 제대로 파악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예.

그리고 출산크레딧이 왜 있는 제도입니까? 결혼·출산해서 연금 가입기간 확보하지 못하는 것 막고 누구나 안정된 노후 누리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OECD 보고서에서도 크레딧제도 확대하라고 얘기했고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연금 보고서는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거기에 그 내용 나와요. 그러면 기재부에서도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국고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아까 얘기한 사전 지원, 사후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번에 보고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영석 예, 오기형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 오늘 여야 간사, 양당 간사 합의하면서 각 정부부처에 요청했던 것들 중에서 상황 보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질의가 없어서 이

것을 준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 당혹스럽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위원님 들으시기에 좀 부적절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예, 준비 부족이다…… 실제 보고할 때도 그 보고 관련돼서 몇 가지 기재부가 이야기 나왔었는데 별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답변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연금특위 과정에서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에서 앞으로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한반도의 중심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처럼 기초연금, 노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들이 중층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국민 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튼튼하게 밑받침을 해 주어야 다른 연금들도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다층 연금체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모수개혁안이지요—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과반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장관님,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떤지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특히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2030 청년층의 비토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60%가 넘는 청년층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60대와 70대 이상 분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분들은 이번 개혁안과 이해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납부기간도 끝나셨고 개혁안에 따라 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층은 개혁안에 따라 앞으로 가장 오래 연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수급하는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청년층이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 세대에 비해서 부담은 크고 연금 급여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연금 고갈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런 점을 참조해서 빨리 구조개혁의 결과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위원** 청년층들이 그렇게 불만인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층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왜 우리가 개혁안에 담지 못한다고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닌데 하여튼 이번에는 모수개혁에 중점을 뒀고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찬찬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의 합의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위원** 과연 그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청년층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계속해서 모수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관심 가져 주셔야 되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용태 위원** 청년층들이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령에 대한 불공정성이 있겠지요. 지금 청년세대는 공정에 대한 가치를 어느 세대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고요. 물론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 세대는 적은 금액을 넣고 훨씬 많은 금액을 받는데 청년세대들은 더 많은 금액을 내고도 받는 것이 적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청년들이 그럴 바에는 덜 내고 덜 받더라도 제2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15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무 살 청년은 45년 뒤인 207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연금이 고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재부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71년 기금이 고갈되면 필요보험료율을 39.2%로 올려야 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폭탄 돌리기 식으로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고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연금개혁을 폰지사기에 비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청년층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연계해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은 청년층이 공감하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연금특위에 청년층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청년들이 왜 화가 났는지 보고자료에 보면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2번에 보면 연금개혁으로 20세 청년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현행 14.3%에서 12.7%로 경감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청년층 누가 ‘아, 보험료가 경감됐구나’ 하고 수긍하겠습니까. 기존 보험료율을 9%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56년도에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 올라갈 보험료까지 추계해서 ‘경감’이라고 하면 납득이 될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것은 표현을 조금 고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정확한 것은 기금 소진 연도를 감안했을 때 기금이 소진되면 바로 부과 방식으로 바

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입자분들의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는 점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었는데 표현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연금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에 2030 청년층 참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추가로 의견을 더 드리자면 보건복지부가 청년단체들과 함께 2~3개월 공동작업을 통해서 청년층들이 원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심층보고서를 작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도 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청년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차피 연금개혁안이 국회 특위를 통과해야 된다면 국회 특위 차원에서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세대를 의무적으로 몇 % 이상 구성하도록 하시든지, 하여튼 간에 연금특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태 위원**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업무보고 때 보건복지부, 기재부에서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 저하 문제를 똑같은 표현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하라는 표현은 이전 시점에 비해서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복지부, 기재부에 물어봤습니다. 어느 시점 대비 그 시점에서 청년세대의 신뢰가 떨어졌느냐, 그 자료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대요.

신뢰가 떨어진 게 맞습니까, 차관님·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이번에 18년 만에 개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홍배 위원** 자료가 있느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신뢰가 떨어졌다는 자료요? 그전에……

○**박홍배 위원** 5년 전, 10년 전, 18년 전 대비 청년세대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자료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국민연금보다 지금의 국민연금이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 연금개혁, 제도개선을 넘어서 국민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적 대계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으로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 벗어나기가 어렵지요. 저는 3층 구조,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이 두 축이 함께 강화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노후 안정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현장의 현실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이지요. 퇴직금 체불, 고용불안 그리고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후 불안 문제, 이제 더 이상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시스템 붕괴를 예고하는 심각한 경고음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합니

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들이 일시적 위기가 아니고 구조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제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순한 땜질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의 원인에 직접 다가가서 직접 고치려는 외과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퇴직연금제도의 정상화 그리고 정년 연장 등의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국민의 노후 안정도, 연금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차관님께 퇴직연금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사각지대가 있지요, 1년 미만 재직자 그리고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그런데 최근에 비정형 노동자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쿠팡 CLS·CFS와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일용직 노동자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 이것 퇴직연금 사각지대인데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하고 오히려 퇴직금 납부 비율을 더 높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개선 방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아직까지는 순항 중인 것 같습니다. 잔고가 한 86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입률이 낮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이 23.2%, 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이 사외에 적립되지 않다 보니까 임금체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요. 체불액의 한 40% 정도가 퇴직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 예, 맞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렇지요.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하고 노동약자 최소한의 노후 안정을 보장하려면 중퇴기금 가입 대상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입 대상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고용노동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 저희도 원칙적으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의무화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법안이 여러 가지 나와 있고, 특히 뭐냐 하면 사외에 적립하는 게……

○박홍배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원제도가 있지요? 최저임금 130% 미만, 그러니까 급여 273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근로자에 대해서 각각 10%씩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150%로, 지원제도 좀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하신 것은 맞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 세부적으로 협의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규모라든지 특히 재정·세제 지원을 어

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홍배 위원** 최저임금 130% 미만을 150%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에 추가되는 재정이 얼마 정도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 저희가 러프하게 보면 한 76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76억이면…… 우리가 환노위에서 사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토론을 해 왔었는데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피해 그리고 정부의 대지급금 손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에 중퇴기금 지원 확대해서 가입을 늘릴 경우에 오히려 임금체불 예방효과 그리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혹시 차관님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런데 기재부하고는 협의가 어느 수준까지 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김민석**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안도 300인, 100인, 50인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규모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어쨌든 간에 재정·세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박홍배 위원** 제가 듣기로 어쨌든 최저임금 130%를 150%까지 늘리는 데 고작 76억 원밖에 안 드는데 기재부에서 이 예산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기재부차관님, 76억 원 반대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게 26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것으로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저희가……

○**박홍배 위원** 동의해 주실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깊은 단계로 아직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고용노동부차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어느 게 과연 효과적이나 그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2026년부터 중위소득 50%까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지난해 9월에 발표하셨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홍배 위원** 올해 이 예산이 26.1조 잡혀 있는데 내년에 40만 원으로 늘리면 얼마가 증가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내년에 당장 40만 원까지 올릴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대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도 2050년 되면 그게 아마 국고하고 지자체 합해 가지고 한 150조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특위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홍배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발표를 하시면서 올해 소요될 예산 추산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 중위 50% 이하에 대해서 40만 원으로 올리면 얼마가 추가로 소요된다라는 계산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 숫자를 여쭤본 거였는데 답을 안 해 주시는데.

차관님, 기초연금 이렇게 대선 때마다 공약 나오고 이것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열악한…… 윤석열 정부, 과연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노동약자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최저임금 150%로 늘리는 데 76억밖에 안 들어가는 예산 이것 기재부가 반대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반대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기초연금 부분에서 고령화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부담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연금특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다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윤영석**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 예.

노동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다른 위원분들의 질의에서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조금 오해할 만한 답변을 들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기금 고갈이 별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만일 기금이 고갈됐을 때 연금을 지급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를 걷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의 방점은 고갈되지 않도록 개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강조를 둔 것입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재정안정성이 왜 중요한지, 이게 고갈이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고갈되지 않고 유지됐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고갈이 되면, 기본적으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적립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금 수익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둘러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우재준 위원** 일단은 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도 해 주셨는데 기금이 많으면 운용 수익으로 그걸 다시 국민들께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 과거보다 지금 1200조로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5% 수익률을 기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쌓여 있는 이 기금이요.

그다음에 만약에 기금이 모두 다 소진되면 그때그때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율로 이것을 충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지요. 업무보고에도 있더라고요.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개혁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동안에는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소득대체율 인하를 통해 가지고 소진 연도를 계속 연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98년도에도 한 번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2007년에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PPT를 보면서 당시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당시에 정부안은, 2007년 이전까지 연금은 보험료율은 9% 그다음 소득대체율은 60%였더라고요. 당시에도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부가 낸 최초의 안은 더 내고 덜 받자더라고요.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때 더 내야 하는 금액은,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15.9%로 하고 그다음에 받는 금액, 소득대체율은 50%로 내리겠다라고 한 게 당시 정부의 안이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인구구조 변화에서 이런 재정이 안정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통과 안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못 했습니다.

○**우재준 위원**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정부안에 있었던 소득대체율 50%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삭감해서, 10%를 더 삭감해서 40%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

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하로 개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저는 이게 그때 당시의 기성세대의 양보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것 소득대체율은 받을 돈이잖아요. 받는 게 임박한 사람들이 이것을 양보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는 것을, 당시에도 분명히 똑같았을 겁니다. 분명히 내는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곧 있으면 돈을 받아 갈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돈을 받아 갈 사람들이, 그냥 50% 내린 것 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받을 돈을 더 많이 줄여서, 40%까지 줄여서 기금의 안정화를 기했다라는 게 이것은 당시의 기성세대가 양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우재준 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당시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당시 안에도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개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7년 연금개혁의 정신입니다. 저는 이번 모수개혁에서 매우 아쉬운 게 이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 통과 안을 봤을 때 소득대체율만 비교하지 마시고 보험료율을 인상한 측면도 같이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보험료율은 앞으로 향후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내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도 나중에 가다 보면 기존 세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 세대가 또 보험료율을 통해 가지고 연금 수급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 세대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것보다는 재정 지속성을 강화해 가지고 노후소득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재정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내는 사람이 더 내는 방법이 있고 받는 사람이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런데 2007년하고는 다른 결론을 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다액의 연금을 받는 분이 어느 정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300만 원 받는 분이 있다고……

○**우재준 위원** 300만 원 받으시고, 부부 합산으로는 542만 원 받는 분이 나오셨네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우재준 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지요. 이게 연금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재준 위원**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분들 집 있을 겁니다. 자기 소유의 집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젊었을 때 소득 많으셨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우재준 위원** 이런 분들, 2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 중에 건물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좀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받는 돈을 줄이거나 연금소득세를 좀 올리거나 어떤 형태로든 기성세대 또한 이런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님 말씀을 고소득층에 한정을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결정이 되면 저소득 근로자나 그다음에 자영업자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우재준 위원** 구조개혁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층화할 수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식** 우재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우리 연금개혁이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당초에는 보험료율 3% 시작한 게 5년마다 3%씩 인상하기로 했는데 98년에 딱 멈췄습니다, 9%에. 그 이유는 국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게 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욕을 얻어먹고 세대 간 형평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묵하고 있다가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28년까지 40% 낮추는 방안으로 했는데 그것이 그러면 그대로 지켜지고 사실은 보험료율을 올렸어야 맞는데, 그러면 청년세대나 미래세대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정부안에서는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자동조정장치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료율 차등화까지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후 두 자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것은 왜 이번 개혁안에 넣지 않았느냐?’ 그래서 비판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21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난번에 1차 개혁이 됐는지 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22대 들어와서도 계속 연금개혁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국민의힘은 여러 부처가 같이 논의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하니까 연금특위에서 한꺼번에 논의하자 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 모수를 조정하는 그 2개 먼저 하자라고 했다가, 계속 그것으로 시간을 끌다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긍정적으로 말씀했고.

그래서 복지부도 지난 2월 20일 날 법안심사2소위 때 복지부 대안을 가지고 왔는데, 51조 4항을 신설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향후 5년 내 연금액 지급을 위한 총지출액이 보험료 총수입을 초과하는 연도가 발생한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2항에 따

라 물가변동률에서 가입자 감소율의 절대치와 기대여명 증가율을 뺄 수 있다', 이것이 자동조정장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미애 위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 이후에, 2월 20일 이후에 다시 가져온 안이 4조의2를 신설한 겁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인지 이름을 재정안정화 조치로 바꿨는데 내용은 '보험료 수입 이외에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1조 2항에 따른 물가변동률을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자동조정장치가 맞지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그러면 13%에 43을 제안해서 이게 속도를 내서 결국은 지난 3월 20일 날 국회의장실에서 복지위 여야 간사님, 원내대표님 이렇게 참여해서……

당초에 의장실에서 만든 합의문 초안에 보면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있는데 2의 5항에 '자동조정장치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당초에 복지부가 대안에서 조문 이름으로 넣었던 '재정안정화 조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특위가 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보험료율 3%에서 9% 올렸고 9%에서 13% 올리는 데 27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그 전 단계의 과정을 잊어 버리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22대 들어와서 합의했던 이 합의의 정신에 충실해서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 저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특위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결국은 재정안정화 조치를 마련하자는 거지요. 노후소득 보장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세대는 반문합니다. 그것을 왜 이 국민연금만으로 하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미애 위원 그래서 다층 연금체계를 계속 설명을 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또 자동조정장치가 OECD 38개국 중에 2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정부안이 제시한 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 이 조정장치를 적용할 시점이 36년이라는 것이 보험료율을 올린 이후입니다, 아니면 9%-40%를 전제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올린 이후입니다.

○김미애 위원 올린 이후. 그러면 13·43을 전제로 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미애 위원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2004년에 연금개혁 일환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양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구조 변동에 있어서 합계출산율이 당시에 얼마냐, 1.29명입니다. 우리는 23년에 0.72이다가 작년에 겨우 혼인율 증가로 0.75로 된 겁니다. 그런 마당에 또 평균 기대수명도 일본은 남 78세, 여 85세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높지요.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도 우리는 이미 진입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는데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험료율을 13.58에서 17년까지 18.3%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이 인상률은 고정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니까? 겨우 13%고 소득대체율은 43%까지 인상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불안한 것은, 당연히 지급 보장 명문화를 해서 국가가 지급하겠구나 신뢰는 있지만 그것 역시 미래세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지요.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 지속가능성을 좀 담보해 달라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논의가 진전돼야 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것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특위가 기존의 그 배경을 우리가 인정하는 상태에서 논의 범위를 좀 좁힐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오기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주로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기재부차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오기형 위원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의식을 지적을 했고 또 그 문제의식 중에 서로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실제 필요한 재정 투입의 규모가 얼마나에 대해서 저는 특히 기재부에서 이 수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이미 준비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로 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지금 특위에서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첫 번째는 저는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봤었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어떤 대안의 마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논의든 간에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인트여서 자동안정화장치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노후에 소득 보장이 안 되는 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큰 설계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각이 좀 서로가 계속 논쟁 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씩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아까 우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했던 게 뭐냐하면 ‘기금이 중요하다.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생각 났습니다. 하나는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겁니다. 아까 4.5나 5.5나 육점 얼마냐 팔점 얼마냐 했는데 실제 그동안 역사적 평균은 한 육점몇 정도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오기형 위원** 실제 5.5라는 것도 무리한 것은 아니다 정도의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더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올릴 것인가의 문제인데 일단 보험료율을 한 번 더 올렸는데 지금 바로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합의의 문제가 있어서 서로 토론을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오기형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실제 그러면 국가의 재원을 더 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 해소든 기금의 지속가능 확보이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오기형 위원** 그러면 실제 어느 정도가 국가의 재원이 투입돼야 되는가에 대한 계산을 보건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준비한 것 있습니까?

먼저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현재 국고 투입의 방식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는데 저희는 보험료 인상 대신 국고를 투입하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크레딧 확대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간접적인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국고 투입 규모는 저희가 별도로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시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의 경우에도 보험료 수입액도 있지만 기금 운용액도 상당했습니다. 실제 운용수익이 160조, 보험료 수입이 62조. 한 해 44조 쓰고 나니까 잔액이 상당히 쌓여 있는데 그만큼 기금이 유지되기 때문에 플러스알파의 힘이 있는 건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일정 시기 지나면 고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정 투입을 하게 되면 기금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성립될 거고 그러면 그 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해에 앞으로 30년 동안 얼마씩 투입해야 되는 것인가 계산해 본 적 있나, 검토해 본 적 있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크레딧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의 질문 속에 이게 있었습니다. 지금 책임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료 납부 시점이 아니라, 그래서 인정해 놓고 나중에 지금 할 시점에서 그쯤에 하겠다 하면 결국 기금 고갈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똑같이 받게 되는 정부의 답변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가치로서 매년 어느 정도씩의 부채가 재정으로 충당 가능한가, 그렇다면 해결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의 해법을 먼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적이 있다, 없다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 대신 국고를 직접 투입해

서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계산한 적은 없습니다.

○**오기형 위원** 기재부도 검토한 적 없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저희도 없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KDI에서, 김미애 위원님이 신연금·구연금 이야기하셨는데 KDI가 신연금 이야기 했지만 KDI 수치가 한 609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609조가 옳은지 그른지, 어떤 사람은 1900조·1700조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김진표 의장한테 보고했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 이게 해법을 서로 찾는다면, 이 금액을 609조라고 가정하면 앞으로 35년 동안 1년에 한 20조씩 투입을 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한 게 1701조 원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 1700조를 나눠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이 없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어렵게 모수개혁에 합의를 했지만 또 추가적인 개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직접 국고를 투입하는 게 옳은 건지는 또 특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개혁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실제 기금이 갖고 있는 잠재적 부채가 얼마인가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재원으로서 어느 정도 조달 가능한가에 대해서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재원 조달 가능한 게 20조든 30조든 다른 나라의 GDP 대비 몇 %씩 국고 재정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회적인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그 투입액 금액으로 해서 지속가능성이 해결된다면 지금 우리 논쟁하는 것 다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제가 알고 있기도는 재정 당국에서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한 연구·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기형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초연금의 경우에 지금 올해 26조 그다음에 2050년에는 150조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기초연금에 그러면 지금 방식이나 지급 대상에 대해서 노인의 빈곤율에 대한, 전기 노인, 후기 노인하면서 약간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고려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실제 이 재원에 대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함께 조정을 해 나가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기형 위원** 기재부차관님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면 좋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오기형 간사님께서 저희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더 근본적으로 아까 KDI 포함해서 이게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국민의…… 뭐 조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반 재정에서 하느냐, 사회보험료로 하느냐, 기초연금은 어떻게 하느냐 또 국민보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

희 앞으로 연금특위에서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오전 질의 이어서 자동조정장치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연금이 삭감되는지를 보여 주시고 아마 그 숫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인순 위원께서 보여 주셨던 그 자료는 가입 연수를 40년을 가정해서 한 거예요. 40년을 가정해서 한 거고 월평균액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슬라이드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것은 가입 연수를 현실화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27년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고요, 30세 같은 경우에는 26년, 40세 같은 경우에는 24년 그렇게 세팅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월평균액을 봤지요.

오전 중에 ‘청년들이 원하는 자동조정장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과연 청년들이 원할까? 봅시다. 96년생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올해 A값인 309만 원을 매달 벌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흔다섯이 되는 2070년에는 얼마를 받게 되나? 저 첫 번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돼 있는 칸 있지요. 그러면 70만 4000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했다고 하는 이 청년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원한다고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어떻게 되나? 그나마 70만 4000원 받던 게 59만 6000원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선우 위원** 자동조정장치가 청년 위한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자동조정장치를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그건 어디 특정 세대만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

○**강선우 위원** 다 깎이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체가 다……

○**강선우 위원** 그렇지요. 다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년을 위해서,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넘버로 증명을 했지요. 그리고 이 자료 복지부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 의원실이 가공한 것도 아니고요.

저소득층 가입자일수록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선우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원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도 국민연금이 방빈의 역할을, 최소한 가난을 방지하는 방빈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깎는다? 그렇지요? 이게 계속 도입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민낯입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된다는 또 다른 근거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선진국들은 다 도입했다, OECD 국가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도입했다. 도입한 것 맞아요. 그런데 도입 했나 안 했나만 놓고 봐서는 안 되겠지요. 그 국가의, 해당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그 이전의 사회복지시스템은 얼마나 두텁게 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57년에 부과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고령화가 급격하게 되니까 보험료율을 꾸준히 인상해 왔어요. 25년에 18.6% 돼요. 그런데 독일은 최대보험료 인상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22%지요. 그리고 이 이상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와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22년 기준 국고보조금이 연금 수입의 22.5%예요. 그러니까 국가재정을 이만큼 쏟아붓고 국민들께도 보험료율을 이만큼 올려서 받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 볼 다른 방법이 없으니 도입한 게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스웨덴 도입했어요. 그렇지요? 1996년에 확정급여형 연금의 관대한 급여체계.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다 못해 급여가 넘치게 지급이 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그걸 좀 조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보험료율을 18.5%로 인상을 함과 동시에 연금제도 자체도 전환을 하지요. 그래서 자동균형장치를 도입해 가지고 DC형 새 연금 체제의 재정 균형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니까 받는 금액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 급여가 삭감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하냐. 실제 삭감은 국가에서 얼마나 좀 방어를 해 주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동조정장치로 인해서 삭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장치들이 다 돼 있는 국가들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뿐만 아니라 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들을 보면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사회복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대한민국에서 A라는 청년이 노후를 맞이하기 전까지 사적인 부담으로 본인이 다 부담하는 바람에 오히려 내 개인이 노후에 대비할 자원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이런 여타의 국가들은 그러면 그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복지시스템이 훨씬 두터우니까 내가 나 스스로도 노후에 대비할 충분한 여력을 주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자동조정장치가 있다 없다, O·X 칠 수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모든 사회복지시스템과 함께 그리고 노후에 급여가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그 삭감된 것을 국가가 얼마나 국고로 지급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O·X를 쳐야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선우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기재부차관께서 그 크레딧 관련해서 발생 시점이랑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수급 시점이랑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복지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기재부랑 좀 소통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기금 고갈 관련해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께 연기금이 고갈되는 게 연금제도가 연금을 못 받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위원장 윤영석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내 연기금이 다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결론 때문이 돼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 점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수급이 확정되신 분들은 아무리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더 받는 것을 좀 덜 받게 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니까 같이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는 취지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금액의 삭감 그것은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니까 정확한 숫자가 맞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기대여명 증가율만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빼면 또 금액은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동조정장치에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특위에서 잘 논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강선우 위원 장단점도 있고 이것을 소득대체율에 부과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급여를 받는 해에 부과할 수도 있고 보험료율에도 붙일 수 있고, 붙일 수 있는 여러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모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어쨌든 소득대체율에만 붙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식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현금성 복지든 현물성 복지든 다른 시스템도 함께 폐기지로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조개혁과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강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식 강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이석을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청년 모경종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업무보고 주신 내용 1페이지, 우리나라 공·사연금체계 표 여기에서 혹시 잘못된 점 찾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표에요?

○모경종 위원 예, 인지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말씀 주시지요.

○모경종 위원 다른 기관에서 낸 자료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공무원에 보면 기초연금 부분이 다르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복지부장관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현행법상 직역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런 규정이 제정된 이유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특수직역연금자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에 비해서 급여수준이 그래도 있고 따라서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급여액보다 적은 사례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6월 연금공단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4만 8000여 명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모경종 위원** 직역연금 수급 여부만으로도 기초연금을 차단하다 보니까 실제 소득이나 실태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금융위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렸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못 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낸 그림에는 마치 대상자가 되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서 오류를 지적한 것이고요.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특수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감소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모경종 위원** 앞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직역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관님,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차단하는 지금 제도가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역연금은 수급액이 높고 또 재정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에서 지금 제외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 소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초연금 개편과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경종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특위를 만들었고 여기 계신 장관님과 각 기관에서 다 힘을 합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래서 이번 우리 연금특위 활동 중에 이 부분을 같이 힘 모아서 수정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실제 소득수준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하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잘 모아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모경종 위원** 지금껏 모수개혁에만 집중하고 여러 가지, 청년세대 간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에만 집중했다면 우리는 이제 연금특위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각지대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직역연금 수급자의 생활 실태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기초연금 지급제도 개선을 위해서 계획을 한번 어떻게,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짜고 있는 게 있다면 다음 회의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공무원연금 담당 부서인 행안부 그다음에 군인연금 담당 부서인 국방부랑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혹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몇 살부터 그게 가능하지요? 18세부터 가능합니다.

보통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이 몇 세부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8세부터 아닌가요?

○**모경종 위원** 의무가입이 18세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경종 위원 의무가입이요, 임의가입 말고.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진영주 예,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글에다가 ‘국민연금 재테크’ 이렇게 쳐 보잖아요? 그러면 ‘임의가입을 일찍 시키세요’, ‘18세가 되자마자 자식들을 임의가입을 시키세요’라는 기사도 뜹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만큼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경종 위원 예, 바로 그 지점인데요. 우리가 청년들과 기성 선배 세대들과의 이런 여러 가지 다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청년과 청년 간에 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더 뛰어나고 흔히 말해 있는 집 자식, 금수저 집안에 있는 청년들은 이런 정보를 더욱더 빨리 접하고 18세부터 임의가입을 통해서 본인의 연금수령액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의 균등, 기회의 평등도 청년세대의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같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요청하면 그 관련된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청년세대가 임의가입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금 구조개혁의 전체 그림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 할 일을 정리해 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리해 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층 연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0층은 기초연금,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1·2·3·4층의 그림이 있지만 0층 기초연금, 재정 투입되는데 충분치 못하고 노후빈곤 심각합니다. 1층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구조개혁 하고 있습니다. 2층 퇴직연금, 가입률 또 그리고 이것이 노후보장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 부분에서 아직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층 개인연금, 금융위가 보고했듯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0층, 1층, 2층, 3층은 있지만 어느 한 층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구조가 튼튼해야 가구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 이 구조, 다층 연금을 확실히 강구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역할과 책임과 또 진로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정확한 말씀이시고 옛날하고 달리 다층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장치가 많기 때문에 그 장치 상호 간의 연계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연금만으로 개혁을 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를 보장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차관님, F4라는 회의운영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 부총리랑 한은 총재께서 하고 계십니다.

○**박수민 위원** 금융위, 금감원까지 4개 기관이 만나서 거시경제를 연구하시고 분석하시고 대응 방안 고민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4개 기관을 연금4라고 불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부, 기재부, 금융위, 고용노동부, 이 연금4가 고민을 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의 다층 연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회의원들로서 저희가 바꿔야 되는 법안의 문제라든지 대국민 소통의 문제라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납부하고 운용하고 지급하는 기관들은 연금공단이고 금융기관이고 또 퇴직연금기관들입니다. 이 연금4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연금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정부가 바꿔든 정부가 새로 탄생하든 연금4는 지속돼야 된다는 강조를 드리고요.

고용노동부차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득대체율 얼마 정도 커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입니다.

OECD나 이런 데 분석을 보게 되면 퇴직연금이 대체로 한 20~25% 정도를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 같은 것을 보면 가장 이상적일 때 한 25% 정도를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20~25%로 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저희가 이번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면 63~68% 됩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예, 2개를 합쳐서 한 70% 정도를 이상적이라고 OECD 같은 데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득대체율 40을 43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난한 토론을 하고 여야 간에 치열한 토론을 하고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퇴직연금을 발전시켜서 소득대체율 20~25%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퇴직연금을 더 많이 발전시킬 여지가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연금제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이 됐는데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적 노력과 같이 더해지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제 일하는 시간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대체율 20~25를 더해야 저희가 원하는 노후를 그릴 수 있는 70%를 그릴 수 있는 것이지, 국민연금을 아무리 개혁해 봐야 40~43 이런 논의이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게 약화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

이냐? 그러면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해서 재정만 메꾸면 되냐? 그것 다 세금입니다. 그러면 20~25%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 얘기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저희가 더 노력해서,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지금 퇴직연금 현장에 가면 주거래은행이 소개하는 증권사 운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조 그리고 노동자들이 직접 골라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글쎄요, 전문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같이 고려하면서 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조규홍 장관님,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장관님의 견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위한 제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연금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연금이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구제도와 신제도를 분리해서 기존 가입자를 기존처럼 확정급여형으로 운용하고 또 신제도는 확정기여형으로 해서 낸 만큼 받는 이런 형태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그런데 국민연금을 주무해 왔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신·구연금 분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분적립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연금을 분리해서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낸 만큼 받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는 제안인데 저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기존 세대의 연금재원 중 현세대의 보험료를 국고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남인순 위원** 그 국고 부담에 대해서 KDI가 추정한 게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KDI는 600조 원 그다음에 연구원은 1700조 원, 그것도 한번 따져 봐야 되기는 하고요.

○**남인순 위원** 그것도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런 제도 전환 비용이 일단 KDI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소 추정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 해외 사례도 좀 보셨어요? 이런 것을 해 봤던 나라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해외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확정급여형이냐 확정기여형이냐 하는 것은 나라마다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래도 확정급여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변경했던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남미에서도 14개

나라가 있었고요. 동유럽 국가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바꿨었는데 또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발생한 문제가 뭐냐 하면 과소 추정을 한 거예요. 국고가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히 과소 추정해서 폴란드 같은 경우도 그 비용을 대느라고 국유재산을 다 매각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확정기여가 아니라 급여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나오는 의견은 이것을 세대별로 확정기여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세대별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현재 30대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세대로 평균 계산하고 40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준의 방식을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방식으로 갈아타려고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시행하는 나라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대별로 하는 나라는 그나마…… 그런데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을 도입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다시 제도가 원위치 됐다 이런 부분들도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청년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구연금과 신연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신연금제도로 가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기여한 것만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지금 현재 제도는 뭐냐 하면 보통 한 1.7 정도의 수익비가 있거든요. 물론 수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수익비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연기금을 나름대로 운용을 해서 그런 정도의 수익을 내서 그것을 배분을 해 주고 있는 건데 그리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지는 신연금제도로 가는 것은 지금 청년들한테는 오히려 더 불리한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왜곡이 돼서 기존 연금제도가 오히려 상당히 청년들한테 부담을 더 주기 때문에 이것을 구연금으로 하고 신연금을 도입하자 이런 것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주장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Q&A를 만드셔 갖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분리 주장이 나온 것은 본인이 받을 만큼은 자기가 부담하는데 기존 세대의 연금 급여마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신·구연금 분리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 아까 앞서서 기재부 자료에 제가 국고 투입 규모에 대한 전망, 앞서서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아마 크레딧하고 저소득 보험료하고 국고지원이 계속…… 물론 기초연금을 별도로 하더라도요. 그게 전망을 했을 때 26년에서 93년까지 237조 원이 소요되고 이번에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97조 원이 추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사전 국고 투입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돈이 덜 듣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보시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아까 약간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바로잡는 취지에서 좀 답변을 드리면, 아까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단 국고 부분이 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를 확인을 했고요.

다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될 게 최종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수급자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고 결국에는 연금과 국민 재정 간에 얼마를 누가 더 내느냐 덜 내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서 저희가 어느 게 바람직한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예.

○위원장 윤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 그리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 때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이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동부차관께서는 두루누리사업은 오히려 증액이 됐고 실업크레딧만 약간 감소됐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농어촌 보험료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장관이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 보시는 바와 같이 기재부 자료 참고해서, 2024년 8월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치는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봐 보십시오. 오히려 두루누리제도 같은 경우는 22년, 23년은 거의 1조 원대에다가 24년에 8375억 원으로 다운됐다가 올해 다시 8851억으로 일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대폭 다운됐다가 조금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됐고요. 농어업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도 오히려 계속 삭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553억 원이 서서 오히려 2061억이 삭감됐습니다. 22%가 감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히려 큰 흐름 속에서는 삭감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하고는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료 지원에 대한 예산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데 제가 오전에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전종덕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농어가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농어가 인구가 줄어서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추세가…… 추세를 한번 봐 주시라는 거예요. 수치는 지금 다 제공이 안 되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 안 왔거든요. 그래서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2년부터 죽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험료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다, 보건복지

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부장관님, 국민연금공단은 공적연금 업무를 정부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기관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국민연금법 87조에 근거해서 국민연금 사업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나 또는 전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민공단의 관리운영 지출부 현황입니다. 매년 약 5000억 정도씩 관리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합계를 해 보니까 2조 6000억 원대입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겠어요?

관리운영비 중에 국고 지원은 약 100억, 그래서 100억 정도 들어가서 1.8%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 5년 통계를 빼 보니까 운영비는 2조 6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고 지원은 523억에 불과했어요. 1.9%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2%도 안 되는 금액이 국고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국고 지원 중에서도 111억을 지원하셨습니다. 그중에 관리운영비는 100억이 15년째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출산크레딧 11억이 추가돼서 111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관리운영비 정도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PPT 있습니까?

그중에 인건비도 사실 77억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전체 기금 중에서 국고는 1.8%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정부가 국고를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관리운영비 정도는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기금은 1000조 이상의 적립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당해 예산은 아직 국채를 발행해 갖고 적자 재정이니까 아마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은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종덕 위원 우리 국민들이 내는 기금에 정부가 1.8% 하고 국고를 투입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ISDS를 제기해서 사모펀드 메이슨에게 우리가 887억을 배상해야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종덕 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 합병에 개입해서 손해를 끼친 사안을 이 기업에게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쓰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그 당시 손해를 끼친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구상권 등 필요한 조치는 공단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협의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개별 건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연금의 적립금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그 판정 결과와 그다음 것을 봐 가지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글쎄요.....

○전종덕 위원 아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법무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리고 그게 메이슨뿐만 아니라 엘리엇도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마찬가지로 조치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종덕 위원 그러면 계획을 빨리 확정해서 함께 공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요, 김범석 차관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OECD의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가 필요한 사각지대 해소랄지 크레딧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1.7%보다는 국가가 더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전종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복지부가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 부분 복지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0조 이상 적립금이 쌓여 있는 상황하에서 다른 여러 가지 기금 운용하는 부분도 아마 자체적으로 조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1000조가 쌓여 있어도 지금 기금 고갈된다고 청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공단 운영비조차 국가가 국민들한테 떠넘긴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분노가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국가 책임 이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출산크레딧제도의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출산 기간 동안에는 암만해도 소득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정 부분을 정부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 친화 여건 조성, 저출생 문제 해결, 소득 상실

기간에 대한 보상, 여성가입자의 수급기회 보장 등이 목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남희 위원 그런데 현재 출산크레딧 수령자 98%가 남성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남희 위원 왜 그렇다고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게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김남희 위원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 보통 부부 중에 남성이 소득이 높고 나이가 많아서 연금 수령하는 시기가 빨리 오고 연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더 이익이 되니까……

○김남희 위원 예, 더 이익이 되니까 출산크레딧 적용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 상실 기간에 대한 보상, 여성가입자의 수급기회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족을 못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남희 위원 그래서 지금 남성에게 편중된 출산크레딧 혜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출산 시기에 실제 소득이 상실되는 사람이 출산크레딧을 신청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성이 짧은 기간, 10년 못 채우고 경력 단절되던 여성이 출산 시점에 크레딧 적용받게 돼서 전체적으로 수급 기간이 10년이 채워져 가지고 연금 수령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출산크레딧 지원을 출산 시점으로 당기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남희 위원 기재부차관님, 아까 크레딧 지원을 실제 발생 시점으로 할 경우에 일반 수급자한테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차이가 없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딧 지원을 수급 시점이 아니라 실제 발생 시점으로 할 경우에 여성의 수급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제도적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 보셨나 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몰라서요.

○김남희 위원 이제부터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출산 시점으로 크레딧 지원을 당기게 되면 여성이 혜택받을 가능성성이 더 높아져서 제도 목적에도 더 부합하고요. 그리고 재정도 실제 수급 시점보다 50조를 아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같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녀 간에 차별을 두자는 게 아니라 공동 육아 차원에서 가계에 주는 것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남성 거기다 맞춘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사유가 되니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국민연금의 남녀 수령액 차이나 여성들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많이 빠지게 된 그런 문제들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크레딧을 지금 확대하게

된 이유도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막상 나중에 또 받게 되는 게 다 남성이면 우리가 이렇게 개선한 그 목적, 제도의 목적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제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재부차관님께 계속 질문드린 이유가 저희가 복지부에게 출산크레딧 확대나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을 당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복지부에서는 기재부 반대 때문에 못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재부도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서 왜 출산크레딧을 실제 출산크레딧이 발생하는 시점에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 먼저 금융위원장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박홍배 위원 도입 당시에 일부 업권에서 가입자 이탈을 이유로 해서 강력하게 자기주장을 하는 바람에 결국 약간 기형적인 형태로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원리금 보장형까지 포함되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가 됐고 결국 현재 85%가 초저위험, 지금 4월 달부터 안정형으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여기에 자산이 몰려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쪽으로…… 비율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당초에 제도 도입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실적배당형 중심으로 유도하겠다라고 했던 정책 목표가 완전히 실종이 됐고 초저위험 상품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디폴트옵션에서 안정형 상품 제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부분은 고용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금융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자본시장으로도 유입될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박홍배 위원 긍정적으로 보신다니까 다행이고 협의 한번 해 보시고 의원실에 말씀주시길 바라겠고요.

퇴직연금수수료, 그러니까 비용 부담률 어느 수준으로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상당히 높습니다. 0.37인데요. 이게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에다가 일반 상품에 부과하는 펀드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구조적으로 좀 낮추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좀 낮아져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 하시면서 현재 중퇴기금 외에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금융위원장도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의 입장에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보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수수료가 상당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김유진 실장님, 맞지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예,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경우에 굉장히 수수료율이 낮지 않습니까? 한번 궁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유진 실장님, 어쨌든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하시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우 낮은 가입률 그리고 매우 높은 해지율 그리고 이것도 연금 개시 시점에 불과한데 지금 연금화율이 10.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예,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 이후에 일시금으로 찾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수익률인데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 수치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2%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예, 2.07입니다. 사실상 2%라는 굉장히 낮은 수익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다 다 맡겨서 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예.

○박홍배 위원 저는 국민연금보다는 다른 방안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시장에 퇴직연금기금이라는 메기를 풀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개별 사업장마다 분산되어 있고 또 수익률을 개인의 투자 실력이나 운에 맡기는 형태로는 투자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리기가 어렵고 비용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퇴직연금은 아까 보고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2040년경에는 아마 국민연금기금 잔고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을 대규모 기금으로 통합을 하면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이 될 거고 또 수익률이 올라갈 거고 운용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연금화율이 높아질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 이상의 소득대체율 보완효과도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사 합의로 개별 금융회사에 맡기는 대신 국가가 설립한 공적기금에도 퇴직연금을 위탁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노동자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이고 공공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이고요.

일본의 경우에 퇴직연금기금연합회를 통해서 중소기업퇴직연금 공동 관리하고 있고 스웨덴도 국민연금·퇴직연금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공공기금화를 통해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퇴직연금제도, 굉장히 열악하지요. 양적 팽창만 있어 왔을 뿐 질적 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가입자 수 675만에 잔고가 431.7조 원인데 관리하는 조직조차 또 감독 기능조차 양 부처에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지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또 지원 강화 그리고 퇴직연

금 기금화 그리고 퇴직연금공단 설립,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입장, 기재부의 입장 각각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말씀 주신 부분의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속도로 어느 단계로 갈지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도 기존의 사적연금 TF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왔었고요. 저희 디테일한 부분은 고용부 중심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방향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기금형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운용하는 플레이어로서 공적기관이나 사적기관이나 많은 플레이어들이 경쟁을 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1개 과에서, 1개 과도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 정도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지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홍배 위원** 저는 특히 금융위원장님께서 지난번 디폴트옵션처럼 금융회사에 좀 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민과 논의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저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밀리지 않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예.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님 두 분에게 번갈아 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생각하실 때 요즘에 60대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게 복지위에서도 노인 연령 상향이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우재준 위원**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PPT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노인 연령 상향해야 된다. 한 70대는 돼야 노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저는 딱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60대에 조금 더 근로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연금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복지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는 써야 됩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

을 줄이지 않으면 답은 없습니다. 재정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는 고액으로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두 번째는 아직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 60대 노인분들 중에 약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수급개시 연령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올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단식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대에는 한 35% 정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70대 넘어가서 제대로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충분한, 완전한 연금을 받는 그런 계단형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을 대신에 나머지는 노동의 기회로 우리가 충분히 보장해야 되고 그 노동의 기회라는 걸 우리가 너무 그 당사자한테 맡겨 두지 말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면요 고용노동부 실장님, 우리가 중장년일자리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우재준 위원** 제가 한번 불러서 여쭤봤거든요. 쭈뼛쭈뼛대시더니 이것저것 취합하시니까 한 800억 되더라고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예.

○**우재준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 기초연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20조가 좀 넘습니다.

○**우재준 위원** 26조 되더라고요. 26조에 비해서 중장년고용정책 예산 800억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나마 조금 있는 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2조 정도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많이 다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복지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냐면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 공익적인 일을 그러니까 어린이들 아침에 횡단보도 건널 때 그런 거를 보호해 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의 60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엄청나게 능력 있고 배운 것도 많으시고, 물론 기력은 젊을 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제가 봐도 기력은 좀 떨어지시더라도 여전히 아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전문성 그리고 젊을 때 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나이에 있습니다. 이런 나이에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고용정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발굴을 해서 또 어떤 기업이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연결도 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고용장려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줄 수 있고요.

노동정책실장님, 지금 실업급여를 몇 세까지 받을 수 있지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적절합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저희가 원래는 그것보다 낫았었는데 지금 고령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좀 상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재준 위원** 저는 훨씬 많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많이 주고 65세가 아니고 70대에도 본인이, 건강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왜 실업급여를 안 줘요, 실업급여 주면 되지요. 그 예산이 기초연금 예산보다 국민연금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저는 중장년 예산, 기초연금 예산 26조 쓴다고 했지요? 2조만 쓰면 엄청난 효과 날 겁니다. 엄청난 효과가 날 겁니다. 정년연장 굳이 100% 하지 않아도 그 모든 짐을 기업에 다 넘기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씩, 사실 그분들 실업급여 6개월·1년씩 줘도 됩니다.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데 왜 그걸 못 줘요.

그렇게 해도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부정수급 많이 안 하십니다. 다들 그렇게 하면 또 힘내서 일하고 하면 그것도 건강에도 더 좋으세요. 그리고 보통 더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엄청나게, 우리는 또 기회가 있는 게 유럽에 가면 빨리 은퇴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은데 우리나라는 좀 덜하거든요.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2004년에 일본이 연금개혁을 해서 2017년까지 보험료율을 18.3%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여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8.3%로 인상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예.

○**김미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이 다른 나라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제조건이 다 다릅니다. 가장 극명하게 비교되는 게 보험료율입니다. 우리나라는 9%인데 핀란드는 24.85%고 스웨덴은 22.3%, 독일은 18.6%, OECD 평균이 18.2%입니다. 우리는 절반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조건이 다른 것 가지고 같이 말하는 게 모순인 지점이 많이 발견되고 또 착시현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당초에는 19.7%로 높여야 되고 43%의 소득대체율을 얻으려면 21.2% 정도로 올려야 되는 것 같지요,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그리고 아까 비교한 것 중에 단순히 자동조정장치를 작년에 정부가 제시한 그 적용을 예시로 둔 게 면 미래를 뒀는데, 최초 적용할 시점을 한 2036년으로 예상해서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미애 위원** 그래서 이때면 현재 2030이 아니라 지금 기득권자들이 그때부터 조정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세대, 미래세대는 이것을 반드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입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어느 특정 세대라기보다 지금부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라는 그 요구라는 겁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미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최근에 우리 당의 연금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전국의 서울대,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전남대 그리고 과학기술원, 한전에너지공대 등 12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공동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포럼을 만들었는데 참여한 인원 한 1384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걸 제가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0.5%가 긍정적이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5.8%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최근에 했다는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이걸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95.8%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비슷합니다. 미래세대의 목소리 반영되지 않았다. 그다음, 높은 보험료율로 인해서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된다. 연금 수령의 불확실성, 세대별 형평성 고려 부족. 이것은 결국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세심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미애 위원 그런데 21대 때도 제가 수차례 의견을 냈지만 되지 않았어요. 자문위원회도 공론화위원회도 2030이 저는 과반 이상은 참여해야 된다고 됩니다, 그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지금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저항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것 중의 하나가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연금 문제를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도 했고 또 국회 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참여해서 공청회를 가지고 싶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미애 위원 기재부차관님도 그렇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김미애 위원 그래서 오기형 간사님하고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세대별 형평성 차원에서도 크레딧 지원 시점을 사전에 하냐, 사후에 하냐 이것도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발생 시점에 하면 우리가 세대 간 형평성을 담보를 합니다.

저도 1분 더 주세요.

나눠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후 시점에 하면 결국은 연금 수급시기이기 때문에 2030이 출산크레딧 다 확대한다 해도 나중에 그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이것을 OECD 대부분 국가가 사전 지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솔직하게 청년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발생 시점에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별로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사전 지원할 때와 사후 지원할 때 국고가 얼마 투입되는지 그런 걸 제대로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보도 제공하고 이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도 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여전히 기재부차관님과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방금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여야 위원 상관 없이 크레딧 관련돼서 언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서 국고가 지금 부담하는, 현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 안 되는 부분이 기재부 쪽에서 소극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기재부가 이 논의에 꼭 들어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저희가 화면으로 '3115 개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하나 잠깐 제안, 소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미 종래의 9%, 40% 그 체계하에서 제안됐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 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기금이 고갈되는데 이 아이디어면 지속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제안입니다, 이분 저자 주장은. 그 당시의 연금보험료 9%에서 12%로 오르면 3이고 연간 GDP 대비 1%의 국고 투입을 하자, 국민연금에. 그다음 연금 평균 기금수익률을 4.5로 가정했는데 6%까지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표현이 3115 개혁안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이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또 다른 분이 최근에 제안하기로는 9%와 소득대체율을 죽 고려하면서 다시 표현을 했는데 '416'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지금 13%까지 조정이 됐으니까요. 9%에서 13%까지 올리자 또 GDP 대비 1%를 투입하자 그리고 여전히 연금 기금수익률은 6%까지 목표로 한번 해 볼 만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지금 보험료 올린 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실은 보건복지부나 기재부에서 그 수치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권에서 합의를 보든지 국민적 설득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점이 지금 안 나와서 아쉽다 이런 거고요. 이후에 한번 논의를 더 해야 될 수도 있을 건데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토론을 하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 연금수익률에 대해서는 4.5, 5.5 아까 최종 여러 가지 기준,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5.5 정도는 현실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더 올릴 수 있는

가의 문제는 별도로 토론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게 전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와 별개로 크레딧이든 뭐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속가능한 걸 위해서 현 시기에 현세대가 국고 투입을 GDP 대비 1%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조달이 가능한 거냐. 다른 나라에서는 OECD 대비해서 6%, 7%까지 GDP 대비해서 부담하는 건데 그게 적절하냐. 지금 세대에서 미리 앞당겨서 풀 방법은 없느냐. 이것을 계산해 봤느냐가 계속 논의의 초점이었습니다, 제 관심의 초점이었고.

각 부처별로 공동TF 자료로 해서 저한테 준 것에 의하면 여기에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있었어요. 그게 한 21.2%,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지균형 보험료율로 해서 그러면 보험료율을 다 올릴 수 있느냐, 올리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그 부분을 국고 투입으로 해서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복리의 효과가 있으니까 충당 가능하냐. 이것도 계산해 봤을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주시지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발상이나 제안에 기초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또 국고 투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보험이니까 사회보험금은 보험료로 충당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참을 올려야 되고, 지금 9%에서 13% 올리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18년 만인가 20년 만에 한 거기 때문에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고 투입을 하는 것도 충분히 논의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GDP 1%라고 하더라도 25조 원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보험료 수입의 40%까지 가까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재 부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같이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TF에서 일단 한번 그 규모를 먼저 산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될 건지도 특위에서 논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기형 위원 차관님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 기재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고 제 개인적인 견해가 좀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 자체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고가 만약에 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뭔가 연금개혁을 위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도개혁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들어갈 부분이지 아까 말씀하신 단순히 율만 조정했을 때 국고가 들어가는 부분은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 구조개혁을 할 때 기초연금이든 또는 재정에 있어서 의무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서로 사회적 토론이 가능한지도 같이 좀 제안을 해서 한 틀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윤영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마치고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3분이고요.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청년들의 우려에 대해서 전달해 주셨는데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저희는 잘 경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했어요, 거의.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남희 위원** 연금개혁, 저출생·고령화나 수명 연장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개혁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보험료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수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두 가지를 하는데 두 가지가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선 하나는 세대 간 형평성,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이 들어난 것에 비해서 받는 돈이 덜 올랐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금 고갈로 못 받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래서 자동조정장치 왜 도입 안 했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얘기랑 두 번째 얘기가 정확하게 모순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처럼 세대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내는 돈만큼 돈을 더 줘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연금의 지속가능은 더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처럼 기금 고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 그래서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서 연금을 깎는다 그러면 청년들이 받게 될 연금액이 더 깎이니까 첫 번째 주장하고는 또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 세대 간 형평성도 중요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고 노후보장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들을 해야 되고 또 그 첫발로 굉장히 굉장히 어렵게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이렇게 연금개혁을 하게 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연금개혁을 왜 해야 되고 또 이 연금개혁이 어떤 아쉬움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잘 설명을 하고 청년들에게도 잘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남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모순되는 지점들이 자꾸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청년분들이 첫 번째 요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보험료 수준보다는 증가 폭이 자기 생각들보다 많았다고 하는 증가 폭, 증가 속도와 관련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위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제도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청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조개혁이 나오면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고 제대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지점이, 청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지금 오른 소득대체율이 중장년들한테는 낸 돈 별로 안 들어났는데 받는 돈이 많이 들어난다, 우리는 낼 돈만 많아지고 받을 돈은 별로 안 들어난다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라간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과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 보험료를 낸 사람이 거기에 맞는 소득대체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도 오해를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장년은 그냥 꿀 빴다, 낸 돈은 별로 안 냈는데 소득대체율만 올라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복지부나 여기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연동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고용노동부 정책실장님, 보고자료 보니까 퇴직연금 가입 관련한 도입률이 사업장의 경우 26.4% 이렇게 쓰여 있고 근로자의 경우 53%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47%가 미가입되어서 단계적 의무화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분석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됐는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가, 가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이 있다.

예를 들자면 2024년도에 사상 최대의 체불임금이 있었습니다, 2조 4000억. 사상 최대의 체불임금 중에 퇴직금이 무려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체불이 전체 8000억이 넘는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고. 그리고 1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약 665만 그리고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이런 노동자들이, 비전형 노동자들이 432만 명 해서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로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 조건이 대단히 낮고 그리고 퇴직금 체불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당연히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조건에서 퇴직연금 가입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이런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사각지대인 거지요. 1인 미만이나 그리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제로 퇴직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이 사각지대인데 이 넓은

사각지대, 거의 1000만, 전체 노동자의 50%에 육박하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퇴직연금 가입률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액수가 적고 그래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겠지요.

그래서 저는 퇴직금 체불에 대한 대책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관련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퇴직연금 도입 자체가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함으로써 오히려 퇴직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연금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폐업이 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는 걸 모르고 근로자들이 그냥 신청을 안 하던, 쌓여 있던 퇴직연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폐업이 된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그것들이 다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제도에 비해서 체불 해결에 있어서는 퇴직연금제도가 굉장히 유리한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퇴직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적립해서 퇴직금을 주는 거라서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여러 특고종사자분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담당할 사업주가 누군지 불분명하거나 아주 다수가 존재하거나 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같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는 다른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퇴직금 체불 문제나 사각지대 해소 없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복지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금이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먼저 발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연금이 아까 오전 중에 논의 때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지금 적립에서 부과식으로 많이 전환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수민 위원** 그런데 아마 복지부와 국민연금에서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 연금을 2차 대전 이후에 발전시키면서 그 연금이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재정이 파탄을 맞고 고갈을 맞으면서 부과식으로 전환됐고

그 과정에서 국가재정은 물론이고 국가 자체가 상당한 위기에 빠졌던 것으로 저는 경제사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970·80년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지금 대한민국이 외롭게 연금을 쌓아 놓고 고갈 위기를 논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진솔하고 생생히 토론할 수 있는 사례는 유럽의 실패 사례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간 것은 불가피해서 어떤 위기를 겪으면서 간 것이지 그것이 좋아서 간 것이나 연금의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나라마다 다 특징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연금 적립금이 쌓여 있는 것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연금 제도의 성숙도가 다른 데보다 낮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각 나라의 역사적 사정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달리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민 위원** 역사적 선례를 꼭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수민 위원** 적립 중에, 기금이 있는 과정에 개혁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축복이고 이 축복을 놓치면 저희 세대의 실수입니다.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고 유럽이 납부식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납부식을 기다린다? 그건 고갈을 기다린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반드시 조사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고용노동부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 지금 저희가 나누듯이 결국은 연금의 문제는 인구구조의 위기에서 출발합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 인구구조의 핵심은 인간 수명이 늘어난 데서 초래합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예.

○**박수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부터 연금을 받느냐 이 토론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그 부분에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있는 계속고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고용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라면 연금 개시 시기는 늦어지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예, 아까 우재준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다뤄야 될 논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환기를 드리는 건데요. 반드시 계속고용의 문제가 포함이 돼야 된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예,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께 한 가지 확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 변경된 43%는 이후의 세대에게 적용된다라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48%……

○**우재준 위원** 43%, 소득대체율 43%라고 했는데 이게 보험료율은 천천히 오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우재준 위원** 그런데 43% 소득대체율은 즉시 오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은퇴가 임박한 세대는 이번 모수개혁안 때문에 9%의 보험료를 내고 즉시 43%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지금 현재 스케줄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매년 0.5%p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오르고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은 43%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임박하신 분들은 그 혜택을 받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겠지요.

○**우재준 위원** 그런데 혜택을 받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우재준 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지금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받는 양이 늘어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게 늘어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고통 분담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년세대는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데 소득대체율만 보면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은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청년세대가 더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거지요.

○**우재준 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은 저희 기금 고갈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많이 못 믿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2007년에 했고 이번에 또 한 것처럼 아마 20년 지나면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때 가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때 가면 분명히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제가 올해 37인데요. 저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더 적게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근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적게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게 아니면 그때 가서 인구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면야 달라지겠지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게 완벽한 개혁이 되지 않더라도 매번 개혁을 할 때마다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면서 조금씩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은 것에 청년들이 분노한다는 점을 같이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청년들이 굳이 13% 올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도 나라의 고통을 분담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기성세대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통을 분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라는 점을 약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남았는데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기초연금이 보니까 지금 노인 자산 하위

70%분에게 모두 주는데 노인분들도 이제는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노인 빙곤하다라고 그냥 정의하기 좀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노인빈곤율이 OECD 최상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가입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들 자체의 절대소득이 상승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자산을 통한 노후 소득대체가 있기 때문에 인상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의 연금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내렸는데, 그 개혁을 했는데 그걸 다시 후퇴해서 보험료율 올리면서 대체율까지 43%로 올리자 그러니까, 게다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도입도 안 하면서 고통 분담을 나눠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지 않으면 하루 885억 적자다 그래서 한 거잖아요. 지금 하더라도 하루에 한 620억 적자는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 43%에 상응하려면, 수지균형 보험료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2% 고 결과적으로 기성세대가 그 차이 8.2%만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 캡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가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겠지요.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보험료를 더 올리든 아니면 국고를 하든……

○김미애 위원 투입을 하든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든 운용 수익을 왕창 올리든, 특별한 건 없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기금 소진 후에 4.5% 기준으로 하면 64년, 5.5% 기준으로 하면 71년인데 그러면 이후의 필요보험료율은 39.2%로 오히려 개혁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갖는 불만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다음에 실제로 세대별 총보험료와 총연금액을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총연금액에서 총보험료를 뺀 수익률 면에서는 현재 50세는 2억 2500만 원, 20세는 1억 1000만 원으로 50세가 2배 더 많습니다. 단지 연금 가입 시기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제도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아가서 미래세대로

가면 전 생애를 부과 방식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까 말씀하신 필요보험료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금 적립금이 고갈됐을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보험료율이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거나 최대한 연장하도록 정부나 국회에서 해야 될 일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어차피 보험료율 올리고 생애소득대체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세대하고 신세대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것을 축소하는 방안으로서 저희가 정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자동안정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가로 논의할 과제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위원장 윤영석 예.

○김미애 위원 그런데 갈수록 개혁이 힘든 이유가 9%에서 13%, 4% 올리는데 27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25년은 연금 받는 사람이 740만 명인데 가입자는 2100만 명으로 수급자보다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3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2050년에 가면 역전이 생겨요. 연금보험료 내는 가입자는 1500만 명인데 수급자는 1600만 명입니다. 당장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 반대인데도 이렇게 저항이 심한데?

그래서 저는 이번 연금특위에서는 지난번에 1차로 모두 조정한 데 이어서 반드시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립니다. 공감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아까 박수민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것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실제 그런 부과식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금의 의미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아까 우재준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기금이 있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 구조개혁에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해서 이 상황을 풀어야 된다는 관점, 그런 문제 인식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기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국고 투입을 좀 더 해서, 현세대가 더 부담하는 방식이 세금으로 해서 국고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서로가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게 저는 우리 특위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미애 위원님도 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한 번 더 잠깐 말씀드리면, 여쭤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 중에서 전반적으로 노인의 빈곤율 내지는 노후소득 보장 방법이 별로 없다, 그래서 빈곤율이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부득이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그런데 어떤 페이퍼들에 보면 전기 노인, 후기 노인 구분을 해 가지고 전기 노인, 즉 65세~75세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산도 좀 있고 그래서 실제 빈곤율이 50%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후에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제안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다,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우재준 위원님 이야기하셨나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70% 대상으로 해서 죽 하는 구조, 지금 현재 26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2050년 되면 150조 정도의 국가예산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지속가능한 구조냐,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개편은 다층 노후소득체계 개편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해에 150조가 한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나 실현 가능성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그 구조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투입될 것인데 실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보다 또 다른 우려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기재부차관님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아까도 기본적으로 이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실 텐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기형 위원 대안을 어떻게 모색할 거냐의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KDI나 여러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실은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당들이 공약 발표하다 보면 좀 무리하고 결국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다 보면 이후에 또 다른 국민적 부담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은 가급적이면 기초연금에 관련된 공약은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기간에. 그런 바람을 여러 군데 하고 다닙니다.

물론 서로가, 각자 후보가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조성되겠지만 실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그렇게 같이 고민하는…… 저는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문제의식을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 계십니다.

김미애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5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학계, 시민단체, 청년단체, 관련 이해당사자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당 간사 위원님 또 연금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선우 김남희 김미애 김용태 김재섭 남인순 모경종 박수민 박홍배 오기형
우재준 윤영석 전종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 허병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연금정책관 진영주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경제구조개혁국장 주환욱

재정건전성심의관 정창길

고용노동부

장관직무대행 김민석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사무처장 권대영

자본시장국장 박민우